

제2018-1호(통권 20권)

NEWS LETTER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소식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NEWSLETTER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CONTENTS

권두언	05
한국사회과학협회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박찬욱(한국사회과학협회 제20대 회장, 서울대 교육부총장)	
특별심포지움	07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과학 교육 혁신 방안 김의영(한국정치학회 회장,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장)	
특별기고	09
한국 사회과학과 SSK 정호대(SSK 네트워크 지원사업단 연구교수)	
남기고 싶은 이야기	11
한국사회과학협회의 초창기와 회장 재임기간 활동의 회고 임희섭(고려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각학각색(各學各色)	14
남북한은 하나인가?	
학회동정	21
협의회 행사	23
협의회 임원진	24



SSK(한국사회과학연구) 사업목적

- 한국사회에 적실한 연구 성과를 축적할 수 있는 우수 연구 집단 육성을 통하여 사회과학 연구의 공공성 증진 및 학문적 자생력 강화
- 국가·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연구지원으로 사회과학 연구의 적실성 제고
- 국내외 사회과학분야 연구 동향정보 제공 및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한국사회과학협회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박찬욱

한국사회과학협회 제20대 회장, 서울대 교육부총장

한국사회과학협회(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KOSSREC)의 2018-2019년 임기 회장에 취임하면서 필자가 느끼는 책무에 대한 단상을 뉴스레터의 권두언에서 피력한다.

KOSSREC은 1976년 창립되어 개인으로 따지면 불혹의 나이를 넘어서는 역사적 전통과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었다. 이는 역대 회장, 임원과 학회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한 15개 회원학회의 구성원들이 기울여온 노력에 힘입은 것이다.

회장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스스로 물었다. “원천을 찾아서, 근원으로 돌아가, 또는 기본으로 향하다”는 의미의 라틴어 ‘아드 폰테스’(Ad Fontes), 영어의 ‘Back to the basics’를 언뜻 생각했다. KOSSREC 정관에서 그 목적을 규정한 바대로 “사회과학계 각 학문의 상호협동을 기하고 한국의 사회과학 각 분야의 연구를 기획조직 및 지원하고 학술정보를 교환하며 국제적 위상을 제고함으로써 사회과학 발전을 기하는” 것이 바로 그 근본이다.

‘아드 폰테스’의 기치 아래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은 KOSSREC 초창기부터 사업을 주도해 온 역대 회장님들의 경험담을 경청하는 것이다. 이 분들의 말씀과 필자의 기억에 의하면 1970년대 중반 이래 약 30년 동안 KOSSREC의 활동은 왕성했다고 판단된다. 이를테면 KOSSREC의 학술 심포지엄 및 세미나에 참석하는 인원은 사회

과학의 분과학문을 대표하는 회원학회의 경우와 비교하여 손색이 없었고 사회과학계와 일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자못 컸다.

KOSSREC은 협동연구, 학제간 연구, 다학제적 연구 등으로 표현되는 학술활동을 지향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 사회과학의 주제, 이론 및 방법론의 동향을 소개하고 사회과학의 한국화를 주창하며 연구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전개했다. 학술활동의 실질 내용을 보면 한국사회가 당면했던 ‘근대화와 발전’ ‘민주화’ ‘세계화’ ‘불평등과 정의’ ‘사회변화와 윤리’ ‘갈등과 통합’ ‘세계질서와 외교’ ‘포용적 성장’ 등을 주제로 하여 탐구했다.

KOSSREC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서 그 본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시대적 요청에 직면해 있다. 최근에 올수록 사회과학 분과 학문별로 크고 작은 수많은 학회가 운영되고 있고 사회과학자들이 자신의 전문분야에 몰입하는 경향은 더욱 강해졌다. 사회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하며 사회적 난제를 해소하려면 융합적 접근이 절실히 자명하지만 대다수 사회과학자들은 자신의 전공에 갇혀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KOSSREC은 회원학회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각 학회에 소속된 연구자들이 좀 더 열린 자세와 폭넓은 관점을 가지고 학제 간 학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

거창하게 말하면 KOSSREC의 르네상스가 시대적 과업이다. 15세기 네덜란드인으로서 문예부흥을 선도한 에라스무스는 '아드 폰테스'를 주창했다. 인간중심의 고대 그리스 원전으로 돌아가자는 외침이었는데 KOSSREC의 르네상스는 학제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사회의 당면과제에 대해 융합학문의 시각에서 탐구하는 기본 역할의 수행에 심혈을 기울일 때 가능하다.

2018년 KOSSREC의 활동은 종전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펼쳐지고 있다. 4월 27일에는 한국정치학회와 함께 '사회적 가치와 민주적 혁신'을 주제로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 학술회의는 이 시대에 요구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규범적 논의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적 혁신 모델과 전략을 탐색하였다. 마지막 라운드테이블에서 필자가 사회를 맡고 정치, 사회, 문화인류, 행정학회 회장이 발제자로 참여하여 학제 간 통섭적 논의를 펼쳤다. 예년과 유사하게, 올 상반기에는 정책포럼과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SSK) 네트워킹 홍보의 일환으로 안민포럼, 주간지 '중앙 이코노미스트'와 공동 기획하여 중앙 이코노미스트 기고문을 통한 지상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남북한 관계, 무역전쟁, 미투 운동, 개헌이 이미 다루어졌고 대입제도, 댓글문화 등에 대한 토론은 추후 연재될 예정이다.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미래인력연구원, 일본 아즈미 국제교류재단과 공동으로 평화와 번영을 주제로 한 아시아미래학회가 서울 양재동 소재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다. 학제 간 논의와 연구자 네트워크 형성으로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기여할 목적을 갖는 이 학술행사의 기초패널에 KOSSREC 회장단이 참여한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심포지엄 및 세미나에서 다루어질 주제는 다양할 것이다. 한반도 주변의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평화 및 통일의 문제, 또한 남북한 사회과학 교류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본질과 영향, 그리고 이 시대 사회과학 발전을 위한 학문후속세대 육성 등의 과제에도 관심이 경주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가적으로 당면한 여러 난제, '촛불혁명'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 공공 거버넌스의 시스템과 그 작동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향후 국제학술지 KSSJ는 계속하여 최소 연2회 발간될 것이며, 2019년 하반기 베트남에서 개최될 아시아사회과학협의회(ASSREC) 학술회의의 참가는 KOSSREC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것이다.

사회과학 진흥을 위해서 대정부 접촉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민간투자가 부족한 실정에서 정부차원의 지원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2월과 3월에 인문학 분야 대표들과 함께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를 면담한 바 있다. SSK 사업은 2020년도에 종료 예정이어서 이미 구축된 우수 연구센터를 뒷받침하는 후속 SSK+ 사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 연구자와 학술단체는 인문학의 경우와 비교하여 정부지원 확보에 관심이 저조하다. 인문학 관련해서는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약칭 인문학법과 그 시행령이 제정되어 제도적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다. 인문학의 위기에 대한 인식은 일찍부터 공유되었고 관련 대학, 연구소와 학회가 연합하여 정부지원을 줄기차게 호소해 왔기 때문이다. 기초 사회과학은 인문학과 크게 다르지 않은 위기에 처해 있다. KOSSREC은 사회과학의 진흥을 위해 이와 같은 현실을 외면할 수 없으며 사회과학의 여러 분과학문을 아우르는 연대를 공고화하기 위해 선봉에 서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과학 교육 혁신 방안*



김 의 영

한국정치학회 회장,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장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부터 현 한국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한마디로 기존 효율성 위주의 단일한 가치가 아니라 새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규범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5년 9월 발표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기존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잇는 후속 프로그램이다. 개도국 빈곤문제 해결과 개발원조에 중점을 둔 8개의 MDGs를 넘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경제, 사회, 환경, 영역의 통합적 발전을 위한 17개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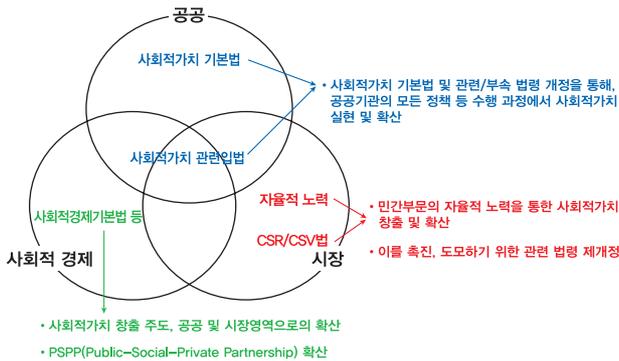
〈법안 제3조 제1호 사회적가치의 정의〉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나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다.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라.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바.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사.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아.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자.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차.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카.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타.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파.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그림 1. MDGs vs. SDGs

2014년 6월 17일과 2016년 8월 17일 두 차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일명 ‘사회적 가치 기본법’)안을 보면 제안 이유로 “신자유주의 성장전략은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성장도 더 이상 불가능함을 증명. 대다수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사회통합을 유지하는 데도 한계에 봉착. 세월호 참사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웠던 우리 사회의 민낯을 직시하게 함. 이제는 이윤과 효율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도록 국가시스템을 바꾸어야 할 때”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법안 제3조, 제1호에서 사회적가치를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정의하면서 실로 다양한 목표를 제시한다.

이 외에도 ISO26000, 유엔 글로벌 컴팩트, 지속가능성 보고서(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등 여러 가이드라인 혹은 지침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노력은 다음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 시장, 사회적경제 전 영역을 아우른다. 즉 글로벌한 차원에서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모든 행위자들이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폭넓은 사회적 가치와 통합적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패러다임이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 2018년 4월 27일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에서 “사회적 가치와 민주적 혁신”이라는 주제로 한국정치학회와 한국사회과학협의회 공동 특별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본 원고는 심포지움 내용의 일부를 간추린 것입니다.



대학 또한 이러한 전 지구적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ISO26000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대학은 사회 구성 조직의 일원으로 사회적 가치 추구하고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해야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대학의 교육적 역할과 특히 사회적 현상을 다루는 사회과학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과학 교육 혁신'에 대한 사회과학계의 고민이 절실한 시점이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현 사회적 가치 논의는 사회과학 모든 전공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정치학과 관련하여 유엔 SDGs의 16번, 17번 목표인 '평화, 정의, 강한 제도'와 '글로벌 파트너십'은 각각 국내정치와 국제정치가 추구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현 한국의 사회적가치기본법안은 아예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을 핵심적인 사회적 가치 중 하나로 제시한다.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과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또한 정치적 함의를 내포한 사회적 가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2018 한국정치학회는 시민정치 교육·연구·실천 프로젝트를 시도해 왔다. 현재 한국정치학회의 주도로 전국 20여개 대학 정치학과 혹은 정치학 관련 전공에서 지역기반형 정치학 수업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https://rilla7.wixsite.com/civicpolitics> 참고). 정치학계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 혁신 예로서, 지역참여 정치학 교육연구실천 프로젝트를 통하여 정치학 교육과 연구의 혁신과 함께 정치학의 사회적·지역적 기여를 증진할 수 있다는 비전을 공유한다.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연구실천 차원에서 혁신적 수업 모형을 개발하고, 다양한 학술적 연구 성과를 발표하며, 지역 차원에서 실질적인 사회적 기여도 도모한다.

설립취지

정치학 서명 전공에 따라 기존 교육 중 적절한 수업을 선택하여 지역 기반 학습(CBL: Community Based Learning) 도입을 도모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수동적인 학생으로부터 능동적인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한편 학생들과 함께 지역 사회를 연구하고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실천하는 아이디어로, 지역 기반 정치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한국정치학회 내에 시민정치 교육·연구·실천 포럼위원회를 설치한다.

이해 2017년도에 첫 개 대학에서 시도되었고, 2018년 17개 대학으로 20여개의 CBL 정치학 수업을 개설하고, 2019년 한국정치학회 학제혁신대회에서 그 성과를 발표하며 향후 모든 정치학 및 관련 전공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집과 매뉴얼을 출판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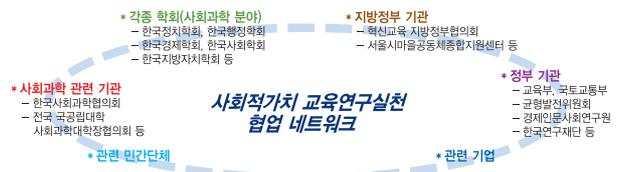
동내 안의 시민정치

동내 안의 시민경제

관악구의 시민정치

관악구 시민 정치 워크숍
관악 시민의 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 혁신은 정치학계를 넘어 사회과학계 전반으로 넓힐 수 있다. 가령 정치학계의 선례를 활용하여 각 지역 별 거점 대학에 지역 별 프로젝트를 이끌 수 있는 플랫폼 내지는 센터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아래의 그림과 같은 형식으로 사회과학 관련 주요 기관 및 학회, (지방)정부와 기업 및 민간단체로 구성된 가칭 사회적 가치 교육연구실천 협업 네트워크를 구성해 볼 수 있다. 거점 지역 별 플랫폼과 관련 기관 협업 네트워크를 엮어 점진적으로 사회적 가치 교육연구실천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아이디어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혁신 교육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우선 사회적 가치 교육연구실천 수업 프로젝트를 통하여 각 대학의 사회과학 전공 학생들을 사회적 가치에 민감한 공적, 민주적 리더로 양성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가치 교육연구실천 융합 프로젝트를 통하여 사회과학 교육의 수월성, 학제간/실천적 연구, 대학의 사회적/지역적 공헌을 추구할 수 있다. 셋째, 지역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플랫폼과 센터를 설립하여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분권과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도 있다.

한국 사회과학과 SSK



정 호 대

SSK 네트워킹 지원사업단 연구교수

SSK 사업의 목적

SSK(Social Sciences Korea) 사업은 2010년에 신설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한국 사회과학연구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사회과학분야 학술연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지원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특화된 연구소를 육성하는 데 있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첫째, 한국인과 한국사회에 대한 심층연구를 통해 사회과학의 연구기반 강화를 지향한다. 둘째, 국가와 사회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전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를 육성하고자 한다. 셋째, 미래사회 전망, 사회문제 해결 및 정책대안 제시를 추구한다. 넷째, 사회과학 연구의 학문자생력 강화 및 차세대 사회과학자 양성을 도모한다.

사업의 세 가지 운영 기조: “경쟁”과 “협력”을 통한 “성장”

SSK 사업은 한국사회가 당면한 주요 이슈들에 대한 사회과학 연구를 수행하려는 연구집단들을 최장 10년 동안 지원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성장”, “경쟁”, 그리고 “협력”은 SSK 사업의 세 가지 운영 기조다. 그래서 이 사업의 모형은 단계적 “성장”모형(소형연구팀(3년) → 중형연구단(3년) → 대형연구센터(4년))이다. 한국연구재단은 사업참여 연구집단들이 연차 및 단계평가를 거치면서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형 연구센터 체제로 전환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로 성장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연구단/팀들에게는 “경쟁” 과정을 겪으면서 연구역량 배가를 기대하는 일종의 진화모형 형태로의 발전이 장려되고 있다. 또한 SSK 사업은 경쟁과 더불어 상생을 권장하는 “협력”모형을 지향한다. 지역, 학과, 혹은 대학 중심의 폐쇄성을 극복하고자 연구단/팀들간 자발적 연구교류가 권장된다. 그 결과 연구의제 중심의 협력 및 연구집단간 연합을 통해 연구성과에서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기대한다. 또한 SSK 사업 전체 차원에서는 매몰 비용 감소를 통한 효율적인 연구비 지원 및 배분을 도모한다. 사업 참여진들간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네트워킹 형성에 대한 강조뿐만 아니라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한 지원노력이 전체 사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온 점은 HK나 중점연구소 지원사업과 비교해 볼 때 SSK 사업만의 차별화 포인트다.

현황과 성과

SSK 사업은 2018년 5월말 기준으로 31개 대형연구센터, 26개 중형연구단, 13개 소형연구팀으로 총 70개의 연구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연구센터/단/팀에는 약 800여명이 넘는 박사급 이상 국내외 연구자들이 소속되어 있다. 사회과학분야 뿐만 아니라 이공계 연구진들도 일부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석박사과정생 신분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을 포함하면 이 사업의 수혜자는 더 늘어나게 된다. 사업 전체 예산은 2017 사업년도의 경우 277억원

이고 2018 사업년도의 경우 266억원이다. 사업 참여 인적 규모 및 물적 지원 정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현재 한국 사회과학분야에 대한 연구지원사업으로서 SSK 사업이 갖는 위상과 영향의 정도가 굉장히 크다. 일례로 연구성과 차원에서 보면 2010년부터 2017년 6월까지 SSK 사업의 지원을 근거로 산출된 논문의 총수는 5,900여 편이다. 이 중 해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편수는 1,300여 편으로 전체 논문의 22.4%에 해당한다. 이 결과는 SSK 사업을 통해 산출된 연구성과가 생산적이면서 동시에 질적 우수성을 담보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또한 동 기간 중 총 900여명의 대학원생들이 SSK 사업에 참여하면서 석사 혹은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분야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관련하여 학문적으로 재정적으로 이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연 평균 100명 이상임을 알 수 있다. 사업참여 연구센터/단/팀들은 연구성과를 사업참여 연구자들간에 공유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활용 - 사회성원들과 공유, 언론을 통해 홍보확산, 정책입안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 - 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오고 있다. 그동안 사업 참여 연구진들이 창출해 낸 연구성과 및 다양한 사회적 활용 증진 활동을 종합해 볼 때, 이제 SSK 사업을 논하지 않고서는 한국 사회과학의 발전을 논하기 어렵게 되었다. 즉, SSK 사업은 높은 위상과 많은 영향력을 가진 대규모 중장기 학술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SSK 네트워킹 지원사업단

연구집단간 네트워킹을 강조하는 SSK 사업의 특성은 사업 초기인 2011년부터 시작된 'SSK 네트워킹지원사업단'의 운영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이 사업단은 2016년부터 (사)한국사회과학협의회와 함께 새로이 'SSK 네트워킹지원 및 성과홍보확산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학자끼리 교류, 학문사이 협업, 사회와 소통, 정책과 연계"라는 네트워킹지원사업단의 모토에서도 잘 드러나듯 사업단은 사업 세부 목표를, 첫째, SSK 연구센터/단/팀들의 성공적인 연구 수행과 세계 수준의 특화된 사회과학 연구센터 육성에 필요한 연구자들간 네트워킹 지원, 둘째, 외부와의 정책연계 강화, 셋째, 연구성과의 홍보 확산, 넷째, 네트워킹 활동을 학술지원에서 지원하는 데이터 구축 및 리서치 활동 수행으로 설정하고, 이 네 가지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아래에 제시된 표는 사업단의 주요 사업 영역 및 내용을 보여준다. (사업단 홈페이지(<http://sskn.kr/>)를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영역	내용
네트워킹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신 연구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연구센터(단,팀)들의 동반 성장을 도모 - 중요 아젠다를 근간으로 연구집단의 연구와 운영에 내실을 다져 창의적이고 발전가능성이 크며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독려 - 협력연구 활성화를 통해 한국 사회과학계의 연구문화 혁신
SSK 연구성과의 홍보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SNS, YouTube와 같은 뉴미디어 운영과 뉴스레터를 통해 SSK 연구성과의 홍보와 확산 - 언론기고, 주요일간지 보도, 세미나 개최, 홍보물 제작 및 배포를 통해 SSK 사업성과의 대중적 공유와 확산에 일조
정책기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SK 연구센터(단, 팀)들의 최신 성과를 입법부, 행정부, 시민사회 등의 사회영역에 제공 - 연구의 공공성 강화 및 학계와 사회의 소통 진작을 통한 정책연계 강화
DATA 구축 및 리서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SK 연구, 연구자, 연구조직, 연구성과에 대한 지속한 DATA 구축 및 갱신을 통해 연구지원 정책의 수립 및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 마련 - 협력 연구의 성공구조와 촉진요인, 학제간 연구의 활성화 방안 연구 및 연구 성과 공유 - SSK 네트워킹 성과분석 등 네트워킹 활동을 학술 차원에서 지원하는 리서치 활동 수행

당면과제

향후 1-2년 동안 SSK 사업은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에 연구팀으로 선정되어 연구단을 거쳐 대형연구센터로 성장한 연구집단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2020년을 기점으로 연차적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동시에 SSK 사업 신규 발주가 추진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즉 기존 사업 참여자들의 경쟁, 협력, 성장 발전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지원방안의 모색이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유례없는 10년간의 한국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제도화된 차별성(개방적 역동적 체계)과 축적된 장점들(경쟁과 협력을 통한 성장 추구)을 계승 발전시켜 한국 사회과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연구성과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선순환 고리를 어떻게 지속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련 당사자들이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집단 지성을 발휘하여 상생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사회과학협회의 초창기와 회장 재임기간 활동의 회고*



임희섭

고려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필자는 한국사회과학연구협회가 창립된 1976년부터 협회의 초창기 활동에 참여하였다. 필자는 제1대 고병익 회장 재임기간에는 편집위원장(1976~1980)을, 제2대 박동서 회장 재임기간에는 연구위원장(1980~1982)으로 참여하였고, 제3대 한배호 회장 재임기간(1982~1984)에는 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그후 1997년부터 1998년까지는 협회의 회장직을 맡아 활동하였다.

그와 같은 협회 참여와 활동의 경험을 회고하는 이 글에서 필자는 협회 초창기의 참여활동과 회장재임기간의 활동으로 나누어 회고하기로 한다.

1. 협회 초창기의 참여와 활동의 회고

필자는 사회과학연구협회가 창립된 1976년부터 협회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기억된다. 협회의 창립은 고병익, 박동서, 이만갑, 전해종, 이해영, 한배호, 홍승직 선생 등 제1세대 사회과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었고, 임종철, 한상복 교수와 필자 등은 그분들을 실무적으로 도와드리는 역할을 한 것으로 기억된다. 창립 당시 창립 멤버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사회과학의 여러 분과 학문들이 학문간 협동연구를 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미국의 사회과학연구협회(SSRC)와 같은 연구협회가 설립되어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기억된다.

그 결과 한국사회과학연구협회(KOSSREC)는 1976년 4월에 창립되었고, 필자는 초대회장으로 취임한 고병익 회장을 모시고 편집위원장(1976~1978)과 연구위원장(1979~1980)을 맡았고 제2대 박동서 회장 재임시에는 연구위원장(1980~1982)을 활동하였다. (당시 협회의 총무는 한상복 교수가 맡아 협회의 실무를 총괄 하였다).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할 때 필자는 사회과학연구협회의 소식지를 발간하기 위해 조순 선생댁을 방문하여 ‘社會科學研究協議會’라는 한자로 쓴 소식지의 제자(題字)를 받아왔던 기억이 난다. 또 협회가 창립되기 이전에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단독으로 발간해 오던 영문학술지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을 협회와 공동으로 발간하기로 함에 따라, 당시 협회의 편집위원회는 영문 저널의 편집을 담당하였고, 출판과 국내외 독자들에게 대한 배포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맡아서 하였다.



〈제1회 한국사회논단 발표장〉

연구위원장을 맡았을 때에는 ‘일제식민지 정책연구’, ‘환경에 관한 지각 및 가치관조사’ 등의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한상복 제6대 회장의 회고록 기사, “한국사회과학협회의 소식” 제2016-1호 참조). 또한 당시 연구위원회는 “일제식민지정책 연구”의 연구책임자였던 차기백 교수를 발표자로 모시고 제1회 “한국사회논단”을 개최했던 것으로 기억된다(제1회 한국사회논단 발표장 사진 참조). 한국사회

* 2016-1호부터 협회 초창기에 참여한 원로 회원들의 원고를 받아서 뉴스레터에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 원고들은 장차 본 협회의 역사를 단행본으로 간행하는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논단은 그 후에도 한동안 계속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필자는 제2대 박동서 회장 재임기간(1980~1982)에는 박동서 회장과 홍승직 교수와 함께 태국의 방콕에서 개최된 아세아사회과학연구협의회(ASSREC)의 총회에 참가하였고, 이 총회에서 개최된 국제 학술회의에서 필자는 "Tasks and Challenges of Social Sciences: Professionalization of Social Sciences in Korea"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필자는 제3대 한배호 회장 재임기간(1982~1984)에는 부회장 직을 맡아 회장을 보좌하였다. 이 기간에 있었던 활동으로 기억에 남아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시행된 제2회 사회과학방법론 워크숍(필자는 운영위원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였음)이고 다른 하나는 한배호 회장, 김경동 교수와 함께 참가한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아세아사회과학연구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일이다. 이 총회의 학술회의에서 김경동 교수가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기억 된다.

2. 협의회 사무실의 사회과학도서관 입주와 관련된 기억

사회과학협의회가 사직동에 있는 사회과학도서관에 사무실을 갖게 된 것은 한배호 회장 재임기간중인 1983년이었던 것으로 필자는 기억하고 있다. 사회과학도서관은 1983년 5월에 설립되었고, 필자는 당시에 사회과학협의회의 부회장이면서 동시에 사회과학도서관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잘 기억하고 있다.

또한 필자는 교수신문의 청탁을 받아 "사회과학 도서관과 나"라는 제목의 글을 실은 일이 있는데, 참고가 될 것 같아 협의회와 관련된 그 글의 일부를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후 이(인표)회장은 사직동에 있는 학교건물을 인수하여 대대적으로 수리를 한 후 1983년 5월에 사회과학도서관을 설립하게 되었고, 사회과학분야의 교수 7~8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나도 그중 한 사람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당시 나는 사회과학연구협의회의 부회장 일을 맡고 있었는데, 사회과학도서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과학교수들의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다른 자문위원들과 함께 사회과학도서관내에 사회과학계 학회들이 무료로 학회 사무실을 사용하게 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리하여

사회과학연구협의회를 비롯해서 한국정치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문화인류학회, 한국심리학회 등이 도서관 건물에 입주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필자가 위의 글을 여기에 인용하는 이유는 첫째로 사회과학협의회 등 사회과학분야의 일부 학회들이 사회과학도서관에 사무실을 두게 된 것은 각 학회들이 도서관측에 입주를 희망하거나 요구해서가 아니고, 도서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학회들의 입주가 도서관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의해 오히려 도서관측에서 각 학회들에게 입주를 초청하였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이다. 둘째로는 당시 7~8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자문위원들 가운데 지금 필자의 기억에 남아 있는 위원들은 경영학자인 연세대의 김기영 교수와 한양대의 황일청 교수, 그리고 사회학자인 성균관대의 석현호 교수와 필자의 네 사람 뿐이다. 그러나 그 당시 자문위원들은 전원이 사회과학분야 학회들의 입주를 이인표 이사장에게 건의하였고 이사장이 그 건의를 수용하였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당시 자문위원의 한 사람이었던 황일청 교수는 사회과학협의회의 제5대 회장(1988~1990)을 역임하였으며, 후에 에스콰이어 문화재단(사회과학도서관의 운영재단)의 이사과 이사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필자 역시 후에 여러 해 동안 에스콰이어 문화재단의 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3. 협의회의 제9대 회장 재임기간의 회고

필자는 1997년 1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약 2년 동안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제9대 회장직을 맡아 수행하였다. 당시 협의회의 임원진은 부회장에 이정복 교수(서울대, 정치학)와 이훈구 교수(연세대, 심리학), 총무에 김영평 교수(고려대, 행정학), 연구위원장에 양종회 교수(성균관대, 사회학), 편집위원장에 김두진 교수(국민대, 역사학) 등으로 구성되었다.

필자가 회장으로 재임했던 기간에 특별하게 회고되는 사안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필자가 회장으로 재임 중이던 1997년이 협의회의 창립 20주년을 맞는 해였기 때문에 창립기념행사를 거행한 일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가 아세아사회과학연구협의회(ASSREC)의 회장국으로 피선된 일이다.

(1) 협의회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협의회는 1997년 11월에 협의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사회과학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로 동아일보사와의 공동주최로 개최하였다 (1997년 11월 29일자 동아일보에 심포지엄 개최를 알리는 사고(社告)가 게재되었음). 당시 동아일보의 남시욱 편집국장이 공동개최를 흔쾌히 수락하고 심포지엄의 발표논문 등을 동아일보에 소개해 주었다. 또한 이 심포지엄은 한국학술재단에서 연구비를 지원해 주었고, 그 외에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주)대우 등에서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해주었다. 그리고 이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논문들은 필자(임희섭)를 편자로 하여 나남출판사에서 1999년 11월에 <사회과학연구협의회총서 6>으로 출판되었다.

(2) “한국의 시민사회와 신사회운동”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

협회에서는 1996년 9월 20일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한국의 시민사회와 신사회운동”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논문들은 임희섭, 양종희 공편으로 1998년에 <사회과학연구협의회 연구총서 5>로 나남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필자의 재임기간에 사회과학연구총서 5권과 6권이 발간된 것으로 보아, 사회과학연구협의회는 필자의 회장 재임기간 이전에 이미 1권부터 4권까지의 연구총서를 발간해 온 것으로 보인다.

(3) 아세아사회과학연구협의회 회장국 피선

필자는 1997년 10월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세아사회과학연구협의회(ASSREC)의 총회에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대표단의 한 사람으로 참석하였다. 그런데 당시 ASSREC의 회장단은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가 다음 번(1999년)의 ASSREC총회를 한국 협의회가 맡아 주최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였고, 우리 대표단은 협의 후에 그와 같은 요구를 수락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한국협회는 다음 총회의 개최국으로 결정됨과 동시에 ASSREC의 회장국으로 선출되었고, 한국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었던 필자는 자동적으로 ASSREC의 회장으로 피선되었다.

따라서 필자는 1997년 10월부터 필자의 회장 임기가 종료된 1998년 12월까지 약 1년 동안 ASSREC의 회장직을 맡아 수행하다가, 협의

회의 제10대 안병영 회장이 취임함과 동시에 ASSREC의 회장직도 자동적으로 안병영 회장에게 인계되었다. 1999년 1월에 취임한 안병영 회장은 그 해에 ASSREC의 총회와 국제학술회의를 조직하여 성공리에 주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ASSREC 회장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ASSREC과 관련된 또 한 가지의 사실을 첨가한다면,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는 초창기에 ASSREC의 사무국을 여러 해 동안 맡아 온 바 있는데, 사무국의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직을 수행해 온 분은 협의회 제4대 회장을 역임한 홍승직 교수이었으며, 홍승직 교수는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가 UNESCO의 IFSSO (International Federation of Social Science Organizations)의 회원국으로서의 활동도 활발하게 수행해 온 것으로 필자는 기억하고 있다.

4. 협의회역의 역할과 미래에 대한 기대

끝으로 필자는 사회과학협의회가 앞으로 더욱 더 발전되어 한국의 사회과학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선진화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사회과학협의회가 원래의 사회과학연구협의회라는 명칭을 사회과학협의회로 개명한 목적이 사회과학분야 개별학회들의 참여와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데 있었던 만큼, 협의회가 앞으로도 학회들 간의 더욱 긴밀한 협동과 공동노력으로 협의회 활동을 더욱 활성화해 나아가기를 기대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본 협의회는 금년 3월부터 안민정책포럼,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SSK-Networking지원사업단과 공동으로 복잡다단한 시대의 화두와 이슈를 다양한 시각에서 짚어보고 조망하는 취지의 기획 기사를 '각학각색(各學各色)'이라는 제목의 시리즈로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지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최근 기사 한 건을 여기에 전재합니다.

SPECIAL REPORT

본지·한국사회과학협의회·안민정책포럼 공동기획 '각학각색(各學各色)'

남북한은 하나인가 ?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일 때가 많다. 한정된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런 시각과 자세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세상은 다르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며 융합적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 의사와 공학자가 만나 인공지능을 만드는 시대다. 본지는 사회과학협의회(회장 박찬욱)·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백용호)·SSK네트워크 지원사업단과 공동으로 복잡다단한 시대의 화두와 이슈를 다양한 시각에서 짚어보고 조망하는 취지의 기획 연재를 시작한다. 첫 주제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상황에 발맞춰 '남북한은 하나인가?'를 선정했다. 정치학·국제정치학·교육학·심리학·문화인류학·사회학 등 6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남북한의 동질성 문제를 조망했다. 분야별 시각 차이를 흥미롭게 살펴보다 보면 자연히 융합의 눈을 뜨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사회과학협의회는 학제 간 협력을 위해 1976년 설립된 15개 사회과학 분야 학회의 연합체다. 안민정책포럼은 좌우통합을 위해 고 박세일 서울대 교수가 1996년 만든 지식인 네트워크다.

SPECIAL REPORT '각학각색(各學各色)' - 교육학

하나의 의식 · 가치관 · 태도 함양부터

남북한 분단 65년 사이 이질화 심화 원인이자 극복 열쇠는 교육

김이경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그 동안 여러 국제 스포츠 이벤트로 남한과 북한이 한민족이고 동족이라는 점을 확인할 때마다 새삼 놀라곤 했다. 남북 공동응원단이 한반도기를 흔들며 '우리는 하나다' 라는 구호를 외치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할 때 금방이라도 통일이 될 것 같은 환상에 사로잡혀 눈물을 글썽이며 환호했을 것이다.

스포츠만큼 그 순간 대중을 열광시키고 뭉치게 할 수 있는 이벤트가 또 있을까? 그러나 경기장과 선수들을 비추던 조명이 꺼지면 달아오른 열기는 그만큼 무섭게 빨리 식게 마련이다. 아무리 잘 연출된 스포츠 행사라도 남과 북의 이질성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

남북한이 진정 하나가 되려면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사실 남북한의 이질성이 심화된 원인은 교육에 있지 않은가. 한반도 분단 후 65년 동안 남북한은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추구해왔다. 이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이질감이 증폭됐다. 제도적 이질감은 남북한 국민의 가치관·사고방식·생활습관·문화양식 등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

다름 아닌 교육의 역할 때문이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학식과 인격을 도야하는 기능을 넘어서 특정 사회 체제를 유지·발전시키는 수단적 기능도 수행한다. 어떤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규범을 잘 짜인 교육 과정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전수시키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남북이 서로 다른 정치·사회 체제를 지향하면서 교육의 이질화도 심화됐다. 그 결과 남북한의 교육은 목적의 차이로부터 교육 과정, 교육 내용, 교과서 등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이질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다. 남한은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고 자율성과 다양성을 키우는 교육을 지향한다.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북한은 교육에서도 체제 유지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다.

심지어 남북한이 동일할 것이라고 여기는 언어도 어휘나 용어, 언어 문화 등에서 이질화가 심화되고 있다. 스포츠 역시 북한 체육활동의

목적이 집단주의 정신과 혁명적 동지애를 키우고 이를 통해 사회주의 건설에 이바지하는 사람을 육성한다는 점에서 남한과의 인식 격차가 크다. 이런 이질성에 더해 그동안 남북한 교육이 지향해온 방향은 민족정신마저 황폐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하나의 민족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데 필요한 의식보다는 경계심과 적대감을 심어왔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이질성을 강화시킨 주범 중 하나가 교육이라면, 장기적으로 동질성 회복을 위한 열쇠도 결국 교육이 쥐고 있다. 분단 이후 훼손된 민족정신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형성된 상호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관념을 타파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려면 교육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단일 민족, 단일 국가로서 한반도가 진정한 하나가 되려면 지난 65년간 이질화된 문화·제도를 교육을 통해 동질화시켜야 한다.

다양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교류와 협력이 민족적 동질성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남북한 국민 모두의 깊은 의식 속에 '우리는 하나'라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남북대결과 적대감·갈등을 부추기는 교육이 아니라 이질화된 요소를 동질화의 길로 안내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다만 이미 상당 부분 이질화된 남북한이 교육을 매개로 민족 동질성을 회복해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남북한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면서 점차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의식·가치관·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미래 세대를 준비시켜야 한다. 아울러 통일 한반도 시대를 내다보며 통일 이후의 교육 방안도 끊임없이 연구·개발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이 때 교육이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김이경 교수는...

교육부 정책지원위원회 위원이자 교육정치학회 부회장이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아직은 갈 길 먼 '하나 된 남북'

현실적 부담에 점진적 통일론 지지층도 줄어 ... 세대별 인식 차이 뚜렷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우리는 하나다’라는 구호와 한반도기가 평창 올림픽에 등장했다. 하나 된 남북의 모습을 보여준 상징이 구호와 깃발이다. 그렇다면 ‘남북은 하나인가?’ 우리는 평창 올림픽의 구호와 깃발처럼 ‘하나의 남북’으로 생각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일시적’으로 그렇다. 근본적으로는 아니라는 말이다. 특히 남북 관련 쟁점에서 뚜렷한 세대 차이가 드러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강화되는 양상이다. 앞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남북은 하나’가 ‘일시적’이라고 보는 건 ‘평창특수’ 효과 때문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평창 올림픽에서 남북이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공동 입장한 것에 대해 10명 중 7명은 잘된 일로 봤다. 잘못된 일이라는 의견은 24%에 불과했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여가 남북 관계 개선에 긍정적이라는 인식도 넓게 퍼졌다.

하지만 이념 성향으로 나누어 보면 진보층이 공동 입장에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지만, 보수층은 긍정과 부정이 엇비슷했다.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 조사 대상자의 59%가 반대하는 결과도 있었다. 방향은 같아도 세부 내용에서는 다르다는 말이다. 평창 올림픽 후 또는 올림픽 진행 중 이뤄진 조사에서 긍정적 의견이 나왔지 평창 올림픽 전 조사 결과는 이와 다르기도 했다. 평창 올림픽 개폐회식 때 남북이 공동 입장을 하더라도 남측은 태극기를 들고 북측은 인공기를 들자는 의견이 절반에 가깝거나 절반을 넘긴 조사 결과도 있다. 특히 중도 보수층과 40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태극기와 인공기 공동 입장을 지지했다.

‘하나’의 다른 표현은 남북이 단일민족 국가라는 말이다. 지난해 한 조사에 따르면 남북을 단일민족 국가라고 보는 사람은 조사 대상자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그렇게 답한 사람 중 60세 이상이 47%로 가장 많았다.

20대의 20%만이 남북을 단일민족 국가로 보고 47%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연령이 낮을수록 남북이 단일민족 국가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은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국가’라고 보는 사람이 73%에 이른다는 올 초 조사 결과도 같은 맥락이다.

같은 맥락에서 통일 필요성에 대한 생각도 세대별로 다르다. 작년에 실시된 조사를 보면 ‘반드시 통일 되어야 한다’는 60대 이상에서 32%로 가장 높고 20대는 17%에 불과했다. 세대별 의견 비율은 문항과 조사 시기 등에 따라 다양하지만 세대차는 분명하다. 나이가 어릴수록 통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비중이 적다.

‘통일보다 현재가 낫다’거나 ‘통일 한다면 10년 후쯤 점진적’으로가 압도적이다. 2000년 이후 조사들을 보면 ‘통일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에 긍정적인 답변은 대부분 20% 언저리였고 15%가 가장 낮았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통일보다는 현재가 낫다’와 비슷한 양상이다.

대다수 사람들은 ‘통일이 10년 후쯤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점진적 통일론에 대한 동의는 70%가 최고였고 최저는 55%, 최근에는 50% 후반 또는 60% 초반이다.

‘점진적 통일론’의 근거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다. 가장 큰 부담을 안아야 할지도 모를 2030세대 중 ‘큰 부담만 없다면 통일되는 게 좋다’고 답한 비율이 절반 근처다. 당위론과 현실적 능력 사이에서 고민하는 거다. 세대의 절반 가까이가 진보적이며 세계 34개국 비교 조사에서도 두 번째로 진보적인 우리나라 20대 10명 중 6명 가까이는 ‘개성공단 즉시 재개’에 반대하고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조사도 있다.

올 초 한 조사에 따르면 남북 관계 쟁점에 대한 우리 내부의 갈등, 남남갈등이 심하다는 데 70%가 동의했다. ‘구호와 깃발의 상징’으로 ‘남북은 하나’가 될 수 없다. 남북 관계와 통일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10명 중 8명이 동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 된 남북’? 갈 길이 멀다.



박명호 교수는...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회장이자 중앙선관위 자문위원이다. 한국정당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SPECIAL REPORT '각학각색(各學各色)' - 국제정치학

남북이 하나 되려면 美·中 공감대 필수

분단의 시작부터 고착화까지 국제적 차원의 변수 없히고설켜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국 제정치학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에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다. “북한은 우리와 다른 별개의 국가인가요?” 잠시 머뭇거린 학생들은 대체로 세 가지의 다른 대답을 내놓는다.

첫째, 학생들은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고 대답한다. 우리 헌법 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전체 영토를 관할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일종의 불법 단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둘째, 북한이 하나의 정상 국가라고 대답하는 학생들도 있다.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결정했을 때, 우리는 평화공존을 전제로 했고, 북한은 현재 각종 국제법과 국제기구에서 정상 회원국가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셋째, 북한은 하나의 국가이기도 하고 동시에 국가가 아니라고 대답한다. 이들은 앞선 두 개의 답이 모두 맞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켜보면서 이 세 가지 서로 다른 대답을 다시 떠올리게 됐다. 북한은 피겨, 쇼트트랙, 알파인 스키 등의 종목에서 단일 출전했다. 북한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회원이자 국제사회의 독립된 국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것이다. 한편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에서 3명의 북한 출신 선수가 우리 선수들과 한 팀이 되어 경기를 치렀다. 한반도 기를 가슴에 달고 하나의 국가 팀이라는 가정 하에 외국 팀과 싸운 것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했고 ‘단일팀’과 ‘분리팀’의 공존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 국민 일부는 매우 난감해하기도 했다. 옛그제까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우리를 위협하던 북한의 양면성에 화를 냈던 것이다. 북한을 일종의 불법 집단으로 인식하는 입장이 배경에 깔려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어차피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불사할 생각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북한을 설득하고 달래서 대화의 테이블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고 운명적 과제이다. 과거의 경우 남북이 서로 으르렁대다가도 일단 협상과 교류 국면에 들어가면 ‘남북은 하나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과 같은 민족적 정서가 짙게 깔리곤

했다.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북한 선수들의 전격적인 참여와 대규모 공연단· 응원단의 남측 방문에도 우리 국민들은 상당 부분 냉정한 분위기를 유지했던 것이다.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북한 측에서 김여정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이러한 우리 국민들의 조금은 차가운 정서와 연관된 측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을 방문한 김여정 스스로 공개적으로 “갑작스럽게 내려오게 되어서...”라고 말한 점은 이러한 정황을 더욱 수긍케 만드는 부분이 있다.

남북은 하나인가? 이분법적으로 대답하자면 남북은 지금 하나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기하는 질문은 ‘남북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로 수정돼야 할 것이다. 3대 권력 승계에 성공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일종의 두 개의 코리아 전략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 대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통일까지 가야 할 길이 너무도 멀고 험난하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국제정치학적으로 보자면 한반도 분단의 시작, 정착, 그리고 고착화 과정에는 국제적 차원의 변수가 너무도 많이 개입돼 있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최악의 경우 미국과 중국의 공감대 형성이 없는 남북이 하나가 되는 길이 아주 요원할 수도 있음을 뜻한다.

70년이 넘는 분단 과정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서, 남북한 관계 차원에서, 그리고 외교적 차원에서 깊숙이 뿌리내린 적대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순간이 됐다.



박인휘 교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자문위원이자 외교부·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이다. 통일준비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초국가 국민 · 민족 정체성 정립할 필요

탈북민 · 조선족 등 소수자 · 경계인 늘어 ... 단순한 '민족=국민'의 도식 넘어서야

정병호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민족과 국민은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유신시대에 의무적으로 암송해야 했던 국민교육헌장의 서두다. 일본 명치천황의 '교육칙어'를 본뜬 국민교육헌장은 분단 국가의 사상 통합과 '국민' 정체성 확립의 도구로 활용됐다. 그 때는 '우리'가 누구인지 확실했다. '민족'이란 단군의 자손, 배달겨레 모두를 뜻했다. '이 땅'은 물론 남한 땅이었다. 북한과 해외에 동포들이 살고 있지만 이들은 언젠가 우리가 구원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다. 흩어진 민족을 통일하는 일, 그것이 민족사의 중심지인 이곳, 남한에 태어난 사람의 역사적 사명이었다.

혈연 공동 운명체로서의 민족 개념은 탈냉전 시기에 중국에서 들어 온 조선족을 만나면서 흔들렸다. 핏줄보다 이른바 국적이 중요해진 것이다. 남한 사회는 가까운 친척이자 같은 말을 하는 조선족을 '중국 사람'이라고 차별했다. 일본에서 태어나 국적을 지키며 살고 있는 재일동포를 우리말이 서툰다고 '반쪽발이' 취급을 하기도 했다. 이 때는 언어를 온전한 민족 구성원으로서의 중요한 자격 요건으로 여겼다.

한편 2000년대부터 남한에 와서 살기 시작한 탈북민 중에는 사회적 차별이 무서워 스스로 조선족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가난한 북한 출신보다는 중국 출신이 업신여김을 덜 당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출신국의 경제 수준이 그 집단을 차별하는 지표가 됐다.

이미 많은 남한 사람이 민족통일은 더 이상 당연한 민족과제가 아니라고 여긴다. 현격한 경제적 차이를 다른 무엇보다 큰 부담으로 여기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범주와 정체성은 더 이상 신성한 혈통이나 반만년 역사에 빛나는 찬란한 문화전통 같은 것이 아니다. 남한 주류 집단의 민족개념은 시대상황과 대상에 따라 매우 급속하게 변했다. 경제 수준과 문화 차이에 따라 이기적인 기준을 들이대어 '우리'와 '남'을 가르고, 정통과 이류를 구별하며, 중심과 주변을 서열화했다. 탈북민과 조선족도 예외가 아니다.

한민족이 아닌 이주민이 늘어나자 국민의례에서 '민족'이라는 단어가

빠졌다. '조국과 민족' 대신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충성의 대상이 바뀐 것이다. 그러나 결혼 이주자와 자녀에게 국민으로서의 통합을 요구하면서도 민족자격은 결핍된 '2등 국민'으로 여기고, 한민족 이주민들은 '국민' 자격에서 배제하거나, 다시 귀화해도 문화적으로 결핍된 존재로 차별했다.

객관적 정치조직으로서의 '국민'과 주관적 문화공동체로서의 '민족'을 엄밀하게 구별해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근대적 민족정체성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의 역사 속에서 형성됐다. 그 후 냉전체제 속에서 남과 북 2개의 국민국가와 주변 4대 강국의 소수민족으로서 다양한 '국민'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됐다. 영원히 일치할 수 없는 국경과 민족 경계선 사이에서 단순히 정치적 담론만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틈새에 존재하는 다양한 경계인과 소수자들이 정체성의 혼란과 실존적 비극을 겪고 있다. 현실의 엄연한 차별과 멸시 때문이다.

이제 복합적 한민족 집단의 민족 · 국민 정체성을 문화상대주의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단순한 '민족=국민'의 도식을 넘어서 민족과 국민 정체성의 다중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초국가 민족 정체성'과 '초민족 국민 정체성' 개념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수많은 이주민과 난민, 망명자, 이주노동자가 겪는 차별구조 해체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또한 민족 정통성을 경쟁하면서 스스로 중심을 표방하고 있는 남과 북 두 개의 국민국가가 단일민족국가의 이념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분단된 남과 북이 정치적 통일을 이루기 전에 만남과 교류, 그리고 상호보완적인 공존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지금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정병호 교수는...

평화디딤돌 이사장이자 한국문화인류학회장이다. 한국문화인류학회 연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탈북민과 남한 주민의 동질감 연구부터

심리적 동질감 차원에서 분단과 통일 문제 다룬 연구 부족해

채정민 서울사이버대 상담심리학과 부교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북한 응원단은 '우리는 하나'를 외쳤다. 이를 듣고 어떤 사람은 '남북한은 분단돼 있고 전쟁까지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생각했고, 또 어떤 사람은 '남북한은 원래 한민족이고 다른 나라 탓에 강제로 분단됐기 때문에 하나라고 봐도 된다'라고 생각했다.

통일 이전의 독일에서도 동질감 문제가 곧잘 제기됐다. 1969년 신동방정책을 실시해 독일의 사회통합주의와 내독관계를 천명하고, 1970년 동서독 정상회담도 열었다. 그런데도 동독에서는 1971년 동서독 주민 사이에서는 동독과 서독이 다른 민족이라는 '2민족론'이 대두됐다. 동서독 분단 후 이질감이 더 강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통일 이후에는 '독일은 아직도 통일되지 않았다' '베를린 장벽은 허물어졌지만 동서독인의 마음의 벽은 더욱 단단해져 간다'는 말이 나왔다. 통일된 지 12년이 지나서도 '새로운 연방주(옛 동독지역) 출신의 직원은 안 됨'이라는 한 기업의 전화상담 직원 채용 광고가 등장했다. 동서독 주민 간 이질감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예라고 볼 수 있다. 이 광고를 접한 동독 출신자의 자존심은 상처받을 대로 받아서 결국 '반발적 정체감'을 갖고 심리적으로는 과거 속으로 들어가 살게 됐다. 이 예를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렇다면 심리학적 관점에서 동질감이란 무엇인가? 물리학적 관점에서는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측면에서 동질성을 다루지만, 인간을 연구하는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동질성 자체를 다루지 않고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을 다루기 때문에 '동질감'으로 개념화한다. 쉽게 말해 '정신과 행동 면에서 두 사람 이상이 가진 성질이나 특성이 서로 같다는 느낌'을 동질감으로 정의하고 다룬다. 단, 이 경우라도 두 사람이 꼭 같아야만 동질감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고, 이질감을 느껴서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일정한 범위에서 비슷하다고 느끼는 것을 동질감으로 본다.

이 심리적 동질감은 남북한의 분단 혹은 통일을 거론할 때마다 중요하게 다뤄져왔다. 남북한 통일 방안에서 '민족동질성'이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사람 있는 곳에 심리학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보면, 동질감을 포함한 분단과 통일의 문제를 심리학적으로 연구할 법한데, 그동안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를 보면 통일 이전에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단과 통일을 다룬 연구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통일된 예멘이나 베트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나마 독일은 통일 이후 1990년대 초중반에 심리학적 연구가 활발했다. 그런데 통일 이후부터 심리학적 연구를 한 독일에서는 동서독 주민이 동질적이나 이질적이나 혹은 동질감을 어느 정도 느끼느냐와 같은 주제로 직접 다루기보다는 '통일의 심리적 영향' '통일의 후유증' '통일 후 국가정체감 형성' '통일 후 문화적 다양성 다루기' '동서독 주민의 심리사회적 특징' '유대인 가족과 비유대인 가족의 적응' '상대적 박탈감' 등의 주제와 함께 다뤘다. 이렇게 동질감을 간접적으로 다룬 이유로는, 동질감이라는 말이 가진 추상성이 크고 동질감이 높아야만 바람직한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남북한 분단과 통일에 대한 심리적 동질감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논문은 지금까지 단 1편에 불과하다. 다른 연구논문에서는 동질감 문제를 남북한 주민의 상호인식, 심리적 거리감, 가치관 유사성(특히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차원에서), 성격 유사성, 국가정체감 등의 주제로 다루었다. 현재 국내에 입국해서 살아가는 북한 이탈 주민과 남한 주민을 대상으로 입체적으로 심리적 동질감을 연구하고,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이탈 주민과 북한 주민을 같은 심리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해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심리적 동질감을 추정하고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사회학·인류학·교육학·정치학 등 인접 분야의 학자들과 학제적 연구를 통해 분단과 통일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파고들어야 할 것이다.



채정민 교수는...

서울시 자문위원장이자 대한군상담학회 학회발전위원장이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혁신처 시험출제위원을 역임했다.

언어 이질성 극복해 소통 · 이해 장벽 낮춰야

탈북민, 언어 격차에 어려움 호소 ... 2030세대의 북한 경시 비율도 높아져

한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남한과 북한은 하나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대답이 가능하다. 하나는 규범적·당위적인 대답이다.

남과 북은 하나여야 한다거나 반대로 그러서는 안 된다는 대답이다. 그동안 이 질문에 대한 상반된 규범적·당위적 입장에서의 대답은 종종 평행선을 그리며 충돌해왔다. 남과 북이 하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반대 입장에서는 '중복'이라 몰아붙였고, 남과 북이 하나일 수 없다는 주장을 반대 측에서는 '분단주의'로 비판했다.

규범적·당위적인 대답과 달리 좀 더 객관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답변도 가능하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 갈라진 후 70년이 넘게 지나면서 여전히 비슷한 특질을 갖거나 서로 공동운명체라고 느끼는 정도와, 반대로 서로 달라져서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따져볼 수 있다. 이 대답은 각자의 이념이나 가치가 아닌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다. 자료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에서 어느 정도 견해차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는 규범적·당위적 대답 때에 비해 훨씬 적다.

남한과 북한이 하나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 글에서의 사회학적 대답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고자 한다. 당위적·규범적 대답을 하려다 보면 논거나 증거를 주관적 입장에 따라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한과 북한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가능하게 해줄 객관적 기준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학계에서 남한과 북한의 문화적 동질성과 이질성을 가능하는 기준으로는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 언어는 의사소통과 문화적 표현의 중요한 기초이다. 비슷한 언어를 공유하면 사고와 소통에서 큰 장벽 없이 서로 동질성을 느낄 수 있는 반면, 언어가 달라져 서로 생각이 어긋나고 소통의 애로를 겪는다면 이질성을 피할 수 없다.

2016년 국립국어원 연구 결과를 보면 남한 표준국어대사전과 북한 조선말대사전을 비교한 결과 일반어는 38%, 전문어는 66% 차이를 보였다. 사용하는 단어가 서로 다르다 보니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며 교류하는 데 장애의 소지가 많다. 2016년 국립국어원 '남북언어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탈북 응답자의

70%가 "북한 말씨 때문에 구직이나 이웃과의 교류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남한 적응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언어 격차를 꼽았다. 남한 일반 응답자 역시 62%가 북한말을 사용하는 사람을 '불편하고 낯설게' 느낀다고 응답했다.

남한과 북한의 이질성과 동질성을 가능하는 또 하나의 기준은 남북한 간 상호인식이다. 북한 사람이 남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남한 사람이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각종 설문조사 결과로부터 알 수 있다. 동아시아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과 북한 주민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5년 36.8%에서 2015년 53.4%로 10년 사이 16.6%포인트 늘었다. 이와 달리 북한을 '우리'(23.4%), '형제'(20.9%), '이웃'(21%) 등 우호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적'(16.1%), '남'(13.5%) 등 경원시하는 태도의 비율보다 높았지만, 2005년에 비해 경원시하는 태도가 크게 늘었다.

주목할 점은 20대 젊은 세대에서 북한을 적이나 남으로 보는 비율이 다른 세대보다 크게 높다는 사실이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 결과도 비슷하다.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2007년 56.6%에서 2017년 41.9%로 14.7%포인트 줄어든 반면, 북한을 경계대상이나 적대대상으로 보는 비율은 2007년 11.8%와 6.6%에서 2017년 22.6%와 16.2%로 각각 10%포인트 가까이 늘어났다.

요약하자면 아직 남한과 북한은 일상생활 언어에서 차이점보다 유사점이 더 많고, 서로에 대한 우호적 인식이 적대적 인식보다 앞서지만, 최근 들어 언어 이질성이 빠르게 높아져서 소통과 이해의 장벽이 커졌으며 젊은층을 중심으로 북한을 경원시하는 태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준 교수는...

하버드 엔칭 연구소 방문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균형경제분과 위원이다.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학회동정

1. 경제사학회

〈2018년 경제사학회 하계학술대회〉

- 일시 : 2018년 8월 25일(토) 14:00~18:00
- 장소 : 중앙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413호

2. 국제개발협력학회

〈2018 국제개발협력학회 하계학술대회〉

- 일시 : 2018년 6월 8일(금) 13:30~19:00
9일(토) 9:00~13:40
- 장소 :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글로벌 경영관
- 주제 : 유엔 SDGs 이행을 위한 시민사회 · 기업의 역할과 국제개발협력

3. 대한지리학회

〈2018 대한지리학회 연례학술대회〉

- 일시 : 2018년 6월 23일(토)
- 장소 : 건국대학교(서울)

4. 한국경영학회

〈2018 한국경영학회 - 한국 IT서비스학회 춘계 공동심포지움 및 최우수경영대상 시상식〉

- 일시 : 2018년 6월 7일(목) 14:00~20:00
- 장소 : 시청 더플라자호텔 22F 다이아몬드홀
- 주제 : 혁신을 통한 공유가치 창출 : 교육 및 IT

5.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학회 제 19차 국제학술대회〉

- 일시 : 2018년 6월 15일(금)~16일(토)
- 장소 : 성균관대학교 국제관(15일), 인문관(16일)
- 주제 : Technological Revolution: Implications for the Global Economy and Korea

6. 한국교육학회

〈2018년 한국교육학회〉

- 일시 : 2018년 6월 22일(금)~23(토)
- 장소 : 제주도 국제 컨벤션 센터
- 주제 : 융·복합시대의 공교육 혁신

7. 한국국제정치학회

〈2018년 한국정치학회-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 일시 : 2018년 6월 21일(목)~23일(토)
- 장소 : 부산 벡스코(21일~22일),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23일)

8. 한국문화인류학회

〈한국문화인류학회 60주년 기념학술대회〉

- 일시 : 2018년 6월 8일(금)~9일(토)
- 장소 : 서울대학교 글로벌 컨벤션 플라자
- 주제 : 한국을 넘어, 인류학을 넘어

9. 한국사회복지학회

〈2018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 일시 : 2018년 4월 20일(금)~21일(토)
- 장소 : 신한대학교
- 주제 : 사회복지가 말하지 않은 불편한 진실
인권을 다시 묻다

10.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회-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공동주최 학술 심포지움〉

- 일시 : 2018년 6월 28일(목) 13:30~18:30
- 장소 : 한겨레신문사 청암홀
- 주제 : 전환기, 한국사회와 사회정책 비전

11. 한국심리학회

〈2018 제 72차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 일시 : 2018년 8월 16일(목)~18일(토)
- 장소 :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 주제 : 심리학, 인간과 기계의 마음을 말하다

12.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회 2018 봄철 정기학술대회〉

- 일시 : 2018년 5월 19일(토)
- 장소 : 부산 경성대학교 건학기념관
- 주제 : 사회 변화와 미디어의 진실성

〈한국언론학회 2018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 일시 : 2018년 10월 20일(토) (예정)
- 장소 :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13. 한국여성학회

〈2018년 춘계학술대회〉

- 일시 : 2018년 6월 16일(토) 09:40~18:00
- 장소 : 연세대 외솔관
- 주제 : 성폭력을 말하다, 민주주의에 도전하다

〈2018년 대학원생 여름캠프〉

- 일시 : 2018년 8월 16일(목)~17일(금)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 주제 : 행동하는 페미니즘, 연구하는 페미니즘(가제)

14. 한국정치학회

〈2018년 한국정치학회-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 일시 : 2018년 6월 21일(목)~23일(토)
- 장소 : 부산 벡스코(21일~22일),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23일)

15. 한국행정학회

〈2018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 일시 : 2018년 6월 21일(목)~23일(토)
- 장소 :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서울 노원구)
- 주제 : 한국 행정학의 성찰과 재도약:
행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공공가치론

협의회 행사

01 협의회 회의

- 1차 운영위원회
일시 : 2018년 2월 13일(화) 18:30
장소 :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 운영협의위원회
일시 : 2018년 3월 9일(금) 18:30
장소 :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 이사회
일시 : 2018년 5월 29일(화) 12:00
장소 :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02 학술 심포지움

- 한국사회과학협의회 & 한국정치학회 공동 특별심포지움
일시 : 2018년 4월 27일(금) 13:00~20:00
장소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주제 : 사회적 가치와 민주적 혁신

03 중앙 이코노미스트 “각학각색(各學各色)” 연재

-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안민포럼, 중앙 이코노미스트 공동 기획

	주 제	게 재 일
1회	남북한은 하나인가?	3월 19일
2회	무역전쟁의 끝은 어디인가?	4월 2일
3회	한국 사회 뒤흔드는 미투 운동	4월 16일
4회	불발에 그친 6월 개헌 그 후	5월 14일
5회	지방선거, 당신의 선택은?	6월 4일
6회	논란의 대입제도 개편 어디로?	6월 11일

협의회 임원진

회장단

	성명	소속	비고
회장	박찬욱	서울대 정치외교학	(전)한국정치학회 회장
부회장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	(현)한국정치학회 회장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	(현)한국사회학회 회장
	이두희	고려대 경영학	(현)한국경영학회 회장
	이승호	건국대 지리학	(현)대한지리학회 회장
	정병호	한양대 문화인류학	(현)한국문화인류학회 회장
감사	변종국	영남대 경영학	
	서현진	성신여대 사회교육학	

이사회 (성명 가나다순)

성명	소속
백완기	고려대 행정학
안병영	연세대 행정학
원우현	고려대 언론학
이진규	고려대 경영학
이종원	성균관대 경제학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
임희섭	고려대 사회학
정용덕	서울대 행정학
정운찬	서울대 경제학
차재호	서울대 심리학
한상복	서울대 인류학

집행위원회

분 과	성 명	소 속	비 고
연 구	한 준	연세대 사회학	위원장
	김 석 호	서울대 사회학	
	김 옥 태	방송통신대 미디어영상학	
	박 정 수	서강대 경제학	
	배 영	송실대 정보사회학	
	서 은 국	연세대 심리학	
편 집	엄 석 진	서울대 행정학	위원장
	권 헌 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법학	
	조 명 환	서울시립대 경제학	
	최 성 주	경희대 행정학	
	하 병 천	서강대 경영학	
	각 학회 편집위원장		
대외협력	박 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경제학	위원장
	김 세 건	강원대 인류학	
	박 상 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행정학	
	박 은 실	추계예술대 예술경영	
	박 경 미	전북대 정치외교학	
	이 승 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사 무 국	한 정 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정치학	국장
	전 성 희		간사

운영협의위원회

학 회	성 명	소 속
경제사학회	김 재 호	전남대 경제학
국제개발협력학회	이 희 진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정보경영학
대한지리학회	이 승 호	건국대 지리학
한국경영학회	이 두 희	고려대 경영학
한국경제학회	김 경 수	성균관대 경제학
한국교육학회	강 선 보	고려대 교육학
한국국제정치학회	김 석 우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
한국문화인류학회	정 병 호	한양대 문화인류학
한국사회복지학회	최 원 규	전북대 사회복지학
한국사회학회	신 광 영	중앙대 사회학
한국심리학회	김 재 휘	중앙대 심리학
한국언론학회	이 민 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한국여성학회	이 소 희	한양여자대학교 실무영어과
한국정치학회	김 의 영	서울대 정치외교학
한국행정학회	강 제 상	경희대 행정학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KOSREC**
(사)한국사회과학협의회

발행인 _ 박찬욱
발행처 _ (사)한국사회과학협의회
발행일 _ 2018년 6월

(사)한국사회과학협의회

03028.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왕산로 1길 25 (사직동)

T. 02-735-2159 F. 02-737-3264

E-mail. kossrec10@naver.com

Homepage. www.kossrec.org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25 Inwangsan-ro 1 Gil (Sajik-dong), Jongro-Ku, Seoul, 03028, Korea

T. 82-2-735-2159

E-mail. kossrec10@naver.com

Homepage. www.kossrec.org